

성규영 한국무선인터넷협회 회장



**“무선인터넷사업은 IMT2000의 사업권을 따낸 몇몇 또는 단일회사가 시장형성과 지배력에 있어 독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IMT2000이다. IMT2000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대형업체 및 중소 업체들의 컨소시엄이 다각도로 경쟁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편에서 다소 소외된 그룹이 있으니 바로 CP들이다. 더불어 모바일 관련 중소 솔루션 개발 업체들 또한 IMT2000과 관련한 화두에서 다소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중소 업체들은 협회나 포럼 등 형태로 다가올 무선인터넷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 이하 키위)의 성규영 회장(에어아이 사장)을 만나 업계의 움직임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재 백승오 기자

**Q** 우선 바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선인터넷 사업과 관련해 언론을 비롯해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업계의 현황과 움직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주지하다시피 무선인터넷사업의 영역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고, 다음으로 디바이스 즉 단말기 및 솔루션 개발 분야, 콘텐츠 분야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IMT2000의 모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솔루션개발 업체 및 콘텐츠제공 업체들은 논의의 밖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상태로 무선인터넷 사업이 진행된다면 IMT2000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사업권을 따낸 몇몇 또는 단일 회사가 시장 형성과 지배력에 있어 독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관련 솔루션이나 단말기 업체, 콘텐츠제공업체의 보호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불어 이들 모두의 목소리가 골고루 포함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IMT2000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러한 목소리를 내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A** 우선 콘텐츠제공업체들을 위한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 요금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용자들이 통신요금의 부담을 느

끼지 않기 때문에 유료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CP들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또 한가지는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금을 나눠 주는 방법인데 이 방식은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말기 및 솔루션 개발 업체들을 위해서는 적용할 기술을 발표하고 미리 거기에 맞추어 기술을 개발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업체에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내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에 있어서도 외국업체들에게 로열티로 지불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업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로열티지불을 없앤다는 측면에서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상의 문제인데 이러한 해결과제는 현재 저희 업체들이 정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IMT2000 사업자 선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적하신 대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 무선인터넷 시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A** 현재 무선인터넷 시장의 성장 추이로 보아서 2005년에는 이동통신으로 인한 매출액의 50~60%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Q** 무선인터넷이 활성화 된다고 해도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이용시 이용 콘텐츠가 한정돼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용빈도가 높은 콘텐츠를 무선인터넷 사업권을 가진 업체가 자체 개발해 제공

한다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결국 지붕만 쳐다봐야 하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까요? 또한 일부 포털 사이트만 자사의 무선인터넷의 CP로 인정한다면 군소 CP들은 결국 사업권자의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A** 물론 그러한 지적은 타당합니다. 우선 지적하신 문제가 실제로 전개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인터넷 속에 있는 모든 콘텐츠가 모여서 거대한 가상세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콘텐츠를 자체개발 한다고 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는 빈도가 낮은 콘텐츠라도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무선인터넷사업자가 서비스제공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그러한 지위를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공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실말씀이 있으시다면?

**A** 우선 앞서 제기 된 해결과제들은 업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조정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선인터넷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체 또는 관련솔루션업체는 상하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이뤄져야 하며,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동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흥미 위주의 기사를 위해 모든 것을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업체로서는 부담을 느끼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무선인터넷협회는 협회를 통한 정보교환 및 BM표준, 기술 표준 등의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때문에 이익단체로만 보는 시각도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